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연내 착공 총력

이달내 재공모…내용 일부 수정 사업자 수익성 증대키로
13~15일 연속회의…골프장 수익금 기부 이행 절차 검토

광주시가 3월 내에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재공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안에 공사 착공까지 마치겠다는 방침으로, 사업자의 참여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기존 공모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어등산 골프장 사업 개장 시 조건이었던 대중제 골프장 9홀 수익금 전액 기부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3일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주재로 어등산 현안 준비회의를 가진데 이어 14일 이용섭 광주시장 주재의 어등산 현안회의를 개최한다. 이어 15일에는 이 부시장이 다시 이 시장 주재 현안회의 결과를 실행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갖는 등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정을 집중하고 있다.

13일 회의에서는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민간사업자 수익성 증대 방안, 건폐율 완화, 개발이익 사회 환원, 비용 절감 등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공모 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14일 이 시장이 주재하는 현안회의에서 결정된다.

이 시장은 12일 오전 간부회의에서도 "올해 안에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재공모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대중제 골프장 9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사회복지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체결한 협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3월 재공모에 이어 6월 중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보, 9월중 협약 체결, 12월 유원지 개발 착수 등 14년간 표류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올해 사실상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와 도시공사는 이번 재공모에서는 주거시설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레지던시 호텔 분양을 금지하고, 5성급 호텔을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상업시설 면적은 기존 규모를 유지하되 건폐율을 높여 사업자 측에 유리하도록 조정하고, 투자규모도 3000억~400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어등산 골프장을 먼저 개장하면서 사업자인 어등산 리조트와 광주시가 약속한 바 있는 '대중제 골프장 9홀 수익금의 사회복지장학재단 기부'를 조속히 실행하기 위해 시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어등산 리조트 측이 지금까지 대중제 골프장의 수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15일 이 부시장 주재 회의에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제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SWEET 2019' 개막

DJ센터서 15일까지 열려

13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SWEET(Solar, Wind& Earth Energy Trade Fair) 2019'가 열려 관람객들이 한국전력관에서 VR을 체험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국제 신재생에너지 전문전시회 'SWEET 2019'(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가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에너지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가 공동주관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오는 15일까지 3일간 태양광, 풍력, 해양 소수력, 이차전지, 수소, 스마트그리드, 전력, 발전 플랜트 등 에너지 신기술과 최신 정보를 선보인다.

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KDN, 한전KPS 등 에너지 공기업과 신성이엔지, OCI파워 등 신재생에너지 대표 기업을 비롯해 전 세계 222개사가 참여해 500여개 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비에이에너지, 탑솔라, 에코전력, 하이솔루션 등 광주·전남 기업도 50개 이상 참가한다. 이 기간에 20개국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상담회, 광주·전남 주관 에너지밸리 채용설명회, 신재생에너지 창업스쿨반 등도 운영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역부동산업계 혼탁…특별사법경찰 증원

광주시, 32명으로 늘려 강력 단속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광주지역 일부 공인중개업소들의 범법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증원하고 다양한 수사기법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수립중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와 자치구 공무원 21명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오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올해 32명으로, 11명을 늘렸다. 지난 1년간 시와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이 395개 업체를 합동단속한 결과 4분의 1에 해당하는 93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시는 72곳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범법행위가 심각한 21곳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동구의 A공인중개사는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했으며, B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명목으로 상한요율을 넘어서는 수수료를 챙겼다. 서구의 C공인중개사는 양도소득세 탈루를 목적으로 프리미엄을 낮춰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동구의 D공인중개사에서는 중개보조원이 알선행위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거나 무자격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등 부동산업계의 불법과 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14일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지명자 32명을 대상으로 수사기법 향상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은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12월 19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뒤 재가동하라"

전남도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전남도의회가 영광 한빛원전 재가동에 앞서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또 원전 사고시 비상대피로인 법성~홍농간 국가지원지방도 미개설 구간(한빛원전 사택 정문 ~ 한빛원전 정문 2.7㎞)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3일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한빛원전 안전대책 강화 및 법성~홍농간 국지도 잔여구간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6개월 간의 점검을 마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 지난 1월 가동에 들어간 한빛 2호기가 가동 이틀 만에 중단, 한 달여 만에 재가동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져 발의됐다.

결의안에는 ▲한수원은 한빛원전 철저한 안전성 확보 후 재가동 ▲원전 유사시 비상대피로인 법성~홍농간 국가지원지방도 잔여구간에 대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장세일 한빛원전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광1)은 "그동안 한빛원전 건설 시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하자 및 부실시공 등이 현실로 나타나 원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먼저 한빛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뒤 재가동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혁신추진위, 공공기관 혁신정책 신속 추진 권고

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주정민, 이하 '혁신추진위')가 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구조조정 등 혁신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정부 혁신 방향에 맞춰 시정 혁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혁신 추진위는 지난 12일 시청 4층 세미나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발령 시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을 수혜자인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도록 권고했다.

지난 2월 범정부 업무혁신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된 서울과학기술대 성욱준 교수(범정부 업무혁신 자문단 위원)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정부 혁신 방향을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회복, 혁신 성장,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으로 구분했다.

추진위원들은 지난 1월 권고한 시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중간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구조조정 등 다른 혁신안에 대해서도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의회,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조례안 발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광주시의회 황현택(민주·서구 4) 의원은 13일 '광주시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고령 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안전운전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황 의원은 "고령 운전자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광주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연평균 11.3% 증가하고 있으며 광주에서는 최근 5년간 49.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산구의회,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 건의안 통과

광주 광산구의회가 지난 13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국강현(가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생명존중을 위한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등 광주광역시 차원의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국강현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사설 동물장묘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역주민의 반대와 갈등이 심화되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경우 주민의 정주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산구도 "주민혐오시설이 집중된 삼도동에 민간업체가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며 " 상대적으로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사체발생률이 늘어나 고 있으나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